4기지방자치출범, 건설공약점검

충북 : 지역 건설업 활성화 7대 공약 '기대'

- 신규물량확대 · 초대형공사의분할발주 · 소규모공공공사의재정발주등 -

충북은국가균형발전사업추진으로신국토중심지대에놓이게됨에따라개발수요가급증하는등그어느때보다지역발전을위한기로에놓이게되었다. 이번민선4기를 이끌정우택도지사의지역건설업활성화 관련 7대건설공약은영세한지역내기반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가 전국 규모의 대형업체로발전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첫 번째 공약은, 지역 개발과 환경 개선 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해추진함으로써지역내신규건설물량을최대한으로확대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지역내공공기관발주물량이급감하는 등지역건설업계전반이 고전을면치못하는상황이므로공약의성패에따라지역건설업체의활성화가기대된다.

두번째공약은초대형건설공사의공구를분할발주하는방안으로, 대형관급공사의공구분할발주방식으로침체된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세번째공약은민간공사금액의50% 이상을도내전문건설업체와하도급을의무화하는 것으로, 공약을현실화시키기위해기반시설공사 추진시 공사금액의50% 이상을대형업체가지역업체와하도급관계를맺도록 입찰 공고문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을명문화할수있는 법적근거가없어 현행법상적용할수없어 중앙정치권의설득을 통해법령개정등의절차가선행되어야만가능하다.

네번째공약은BTL 방식의민자사업에 지역중소업체가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하자는 것. 기획예산처장관이고시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자체가 주무관청이되는 사업에대해필요시 지역중소업체에대해 일정비율의건설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BTL 사업 시행법인(SPC)이제출한사업제안서평가시 지역 업체의 출자 비율, 출자자 수 등에 대해평가우대를함으로써지역업체의 참여를높일수있도록하고있다.

다섯째 공약은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시설은가급적 재정발주형식으로 발주토록한다는것. 이공약의시행을위해서는 BTL 방식을 제외한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재정발주를의무화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가져야할것이다. 70억원미만소규모공공시설사업은재정사업으로추진토록 하며, BTL 방식의 사업은 7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류해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공약은 지자체 발주 70억원 미만 공사는지역제한 공사로지역기업에 의무발주하는것이다. 즉, 지역건설업활성화를 위해지자체발주 70억원미만공사는지역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주한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상추정 가격 7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을 제한해 지역 기업에 발주가 가능하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시일정기간실적공사비에대한단가적용을유예할수있도록한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실적공사비제도를도입 · 적용토록관계규정이개정되어실적공사비단가적용유예는어려운실정이다. 하지만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도로보수및유지관리공사등에대해서는표준품셈 방식으로예정가격을작성, 시행토록할수있기때문에관급공사중소규모, 전문건설, 도로보수및유지관리공사에대한일정기간 실적공사비단가 적용을유예할수도있을것이다.

정우택 지사는 이처럼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7대 건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는 적극적인 도의 의지만으로도 실현가능한공약이있는반면, 국가차원에서의 법령 재개정 작업 등이 추진되어야만 실현가능한공약도있다. 현정부에서는규제 철폐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의지가그어느정권보다강력할뿐만아니라왜곡된국가공간구조의개편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등국가균형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급격한개발수요가증대하는등모처럼지방이활기를띠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불가능한 건설 관련 공약은정부의정책취지에맞게개선해나가려는의지가필요한 때이다.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연구위원